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박경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0465
----------	-------

발의연월일: 2017년 12월 19일

발 의 자: 박경수 의원 외 7명

1. 주 문

- 가.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실현을 위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함.
- 나.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다. 시민들과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실질적 개헌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사무권한 및 재정의 중앙집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립을 기대하기 어려움.
- 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국가사무의 행정효율성 등 진정한 지방자치정책 운영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논의가 필요함.

3. 수신기관 : 국회[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 경기도

4. 건의안 : 덧붙임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우리나라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치시대를 맞이한 이후 지방분권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의 실정을 보면 매우 불완전한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무권한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도 모호하여, 사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재정구조는 재정편중도가 중앙위주로 되어 있고 지방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지방재정의 자립은 기대하기 어렵고 중앙정부의 재정분배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제정도 어려운 실정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자기 책임하에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문제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권한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평등한 구시대의 중앙집권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자치분권, 재정분권 및 열린 혁신정부 등 8개의 국정과제를 주관해 추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새 정부의 '4대 복합 혁신과제'의 하나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가 채택된 것은 현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년 헌법 개정으로 자치입법·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각 지역

의 현안 문제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락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개헌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7. 12. 19.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